

‘3년 연속’ 시한 넘긴 예산안… 여야 ‘네 탓’ 공방만

합의 실패 정부원안 자동 부의
선진화법 후 단 2번 시한 처리
9일 처리 입장… 입장차 여전
“정략적 탄핵”·“민생예산 무시”

여야 대치정국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또 넘겼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며 정부 원안이 지난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는 부의안 상정은 하지 않은 채 협의를 이

어갈 예정이다.

국회는 헌법에 따른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2014년 국회 선진화법까지 도입했지만, 시한이 지켜진 것은 2014년과 2020년 2번 뿐이다. 지난해엔 법정시한을 3주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돼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다.

3년 연속 지각 처리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는 정기국회 안에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견해차 커 정기국회 종료일(9일)까지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증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비비 등 4조

6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8조원 이상 증액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르면 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별검사’를 강행 처리하기로 해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서로에 책임을 전가하며 이날도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으로 예산 정국에 제동이 걸리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결국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낸 논평에서 “국가의 예산안 심사가 3년 연속으로 법정시한을 넘겼다”며 “400건이 넘는 법안 역시 법사위에 막혀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금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기는 하나”며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방송장악을 위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겠다고 일하는 국회를 무력화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듯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를 무시하니 국민의힘도 국민이 부여한 본분

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

임 원내대변인은 “또한 지금 예결위에 서 막판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일갈했다. 법사위 정상화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을 위해 밤을 새울 각오가 돼 있다”며 “국민의힘도 국민이 선출한 대표임을 자각하고 밤을 새울 각오로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尹 ‘노봉법·방송3법’ 거부권… 윤 정부 세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 4월 양국관리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는 앞서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지 22일 만이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12월2일)을 하루 앞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노봉법과 방송3법은 국회로 돌려보내졌다.

서울=김선욱 기자

尹, 이동관 방통위장 사표 수리… 탄핵안 폐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동관(사진) 방통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12시16분께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조금 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11월30일) 늦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는 상황에서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방통위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이나 그런 (탄핵) 사태들을 우려해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대통령에 (사의를) 말씀을 드린 건 맞다”고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민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 상황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방통위의 업무가 전체 마비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퇴할 수도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위원장과 관련해 다양한 검토를 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공백이 너무 길어진다”며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위원장도 (직무 공백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서삼석·이병훈, 민주당 국감 우수의원 선정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과 이병훈(광주 동남 을) 의원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민생·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 및 정부 실정을 바로잡는 등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을 발굴해 원내대표가 수여하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2018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정쟁이 아닌 농산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질의에 담았다는 평가다.

서 의원은 4년 연속 농업인·어업인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현 정부 정책을 점검했다. 객관적인 수치를 토대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목소리와 정부 정책 방향이 엇박자를 타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업 현장의 불만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서삼석



이병훈

직접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병훈 의원은 2020년 이후 임기 중 4년 연속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사유화와 국악·방송의 국정홍보 행사 민간기업 협찬 의혹 등을 지적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 국립중앙박물관의 표절·희곡작품 전시, 공공기관의 과도한 홍보 예산 문제, 아시아문화전당의 비효율적 공간활용 등을 지적하며 전문성에 기반한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김선욱 기자



목포해경, 가거도 해상 불법조업 중 어선 단속

목포해경이 지난달 29일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어업으로 의심되는 중국 어선을 발견하고 단속을 펼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비명계 5선’ 이상민, 민주 탈당 선언… “이재명 사당화”

“고쳐 쓰기 불가능한 상황”

이상민 (사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체제 이후 당이 사당화되고 강성 지지층(개팔) 중심으로 변질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탈당문을 통해 “오늘자로 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 즐거분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4년 정치에 입문할 때의 열린우리당 슬로건 ‘깨끗한 정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는 그때는 물론 지금도 가슴



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 커녕 이재명사당, 개팔당으로 변질되어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되었다”며 “내로남불과 위선적, 후안무치, 약속뒤집

을 설레게 한다”며 “그 이후 현재 5선에 이르기까지 나를 치열한 노력과 함께 성과와 보람도 있었고 자부심도 느끼고 있다”고 떠올렸

다. 기, 방패정당, 집단 폭력적 인동, 혐오와 차별 배제,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저의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그리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삼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했다.

앞으로의 구체적 행로에 대해선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숙고한 후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뉴시스

광주·전남 총선비용 제한액 평균 2억1800만원

정당·후보자 선거비용 공고 고흥·보성·장흥·강진 ‘최다’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때 광주·전남지역 후보들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 2억18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18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지역 8개 선거구 중 선거비용 제한액 최다 선거구는 동구·남구을로 2억3600여만원, 최소 선거구는 서구을로 1

억73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10개 선거구 중 선거비용 제한액 최다 선거구는 고흥·보성·장흥·강진으로 3억8000여만원, 최소 선거구는 여수시을로 1억83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3600여만원, 비례 국회의원 선거는 3억9400여만원 증가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 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 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

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 가격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구 확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최형지·김은지 기자